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북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정동영, 김관영, 김광수, 조배숙 의원.

“군산조선소 재가동 4자협의체 구성”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 기자회견서 정부·정치권·지자체·현대중공업 참여 제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광수·정동영·조배숙 등 국민의당 도내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던 군산조선소가 폐쇄로 전북경제와 군산지역사회는 거의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9%, 군산경제의 24% 가까이 차지하고 전북경제 생산 유발효과만도 2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협력업체와 관련 직원들, 노동자들 6,00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곳이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 여파와 수주절벽에 발목이 잡혀 지난달 1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후인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 문제는 총리를 통해 현대와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어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며 “전북도민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과 달리 알맹이 없는 대책들과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지원 때와는 다른 대처로 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해 추경을 통해 부패비리로 점철된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7조원 이상의 국책은행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건조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온 정부가 정작 건설하게 성장하고 경쟁력도 갖춘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위로박수’가 아닌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실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하루 속히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2019년 재가동은 전북도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투자 방법 쉽게 알린다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 마련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을 개발의 성격에 따라 매립 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유형, 매립과 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형, 공유수면 접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유형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단계별 처리

부서를 명시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가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청 박종민 고객지원담당관은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통합(윈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 고객지원 → 민원사무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文 정부, 러시아 경제협력 본격화

이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설 예정

이르면 8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칭)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외교 위연을 넓히는 부총리급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조만간 사전의견을 조율하러 러시아를 다녀올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에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송 의원은 지난 5월 러시아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19개 사업을 제안받았고 그 가운데 나진·하산의 항만사업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첫 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의 확인 요청에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 예정이

란 것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우리나라 정책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한러 정상회담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극동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과 러시아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증대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극동개발에 관심을 보이자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를 기동,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TF’ 출범

위원장에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연내 최종결과 도출키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기 위한 외교부 장관 직속 TF(테스크포스)가 31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위안부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위원장은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사진)이 맡고,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외교부 동국아시아국장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소장 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이름을 올렸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14~2015년 한일 양



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모두 12차례에 걸쳐 가졌던 ‘국장급 협의’가 중점 확인 대상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TF는 피해자 입장에서 관련 협의 과정을 복기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갈 방침이다.

위안부 TF는 올 연말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최종 결과는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첫 회의 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에 신학철 화백을 선출하는 등 조사위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조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기존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과 감사원 결과 등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은 문화예술계 사안들을 복원하는 작업 등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

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로 민중화가인 신학철 화백이 이끌게 됐다.

또 3개의 소위원회 중 진상조사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소위는 연극평론가인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됐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